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Trade Finance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regulations

홍길중(Gil-Jong Hong)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강사(주저자)

라공우(Kong-Woo La)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 | 참고문헌 |
| III. 세계 무역금융제도의 현황 및 국제적 규제 | Abstract |
| IV. 국제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 |

국문초록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용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무역금융, 바젤 III, 금융규제, 금융위기

I. 서론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동안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시중의 금리보다 훨씬 저리의 금융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금융제도가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최근 수출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수출촉진책으로서 무역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무역금융지원을 통해 수출활력을 되찾아 보자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로 무역금융이 위축되면 가장 큰 타격이 큰 중소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전반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도 여전히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무역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신흥시장개척,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원활한 무역거래를 지원하는 무역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한편,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은행들은 적절한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은행들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초중반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던 각국 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소홀에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0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및 감독 원칙”을 발표하여 유동성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신용경색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금융을 지원하도록 바젤 II 규제적용에 보다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요청의 결과 바젤 III를 새로이 등장시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 지원하는 무역금융제도는 시중 이자율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자금지원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바젤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따라 무역금융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시중은행 중심의 우리나라 무역금융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

1. 선행연구의 검토

무역금융제도에 관한 연구는 그 연구시기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고 있다. 무역금융제도가 정립되는 시기에는 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를 지나가면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무역금융과 수출과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무역금융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시기에 따라, 연구 주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 본 연구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표 1> 선행연구의 검토

구분	주요 연구
1990년대 (무역금융의 제도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금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주된 연구과제 - 진수덕(1976), 이재병(1976) 안강수(1986), 조현숙(1986), 강근수(1989), 정관용(1990), 김상연(1991), 김학영(1993), 이무원(1997) 등 다수 - 무역금융제도가 정착되는 시기로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
2000년대 (무역금융과 수출과의 연관성, 결제방식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ck, T.¹⁾ : 무역금융과 무역간의 관계를 분석, 민간신용/GDP 비율과 상품 수출입통계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신용제약이 무역에 영향을 미침 - Chaney²⁾ : 국내금융시장 여건이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석 - Choi, W.G., Y. Kim : 미국자료를 사용하여 교역신용(trade credit)을 분석하면서 긴축정책시 교역신용이 확대되는 현상을 설명 - 이관희(1997), 유송현(2011), 이운창(2013), 이진우(2013) :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포페이팅, 팩토링 등의 결제방식을 활용함에 있어 그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

구분	주요 연구
2008년 이후 (자본규제와 무역금융의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boin³⁾ : 바젤Ⅱ 및 바젤Ⅲ 규정이 무역금융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 - Asmundson et al.⁴⁾: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와 관련한 바젤규정이 무역금융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 - 장정석·한혜린(2013) :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가 발효될 경우에는 추가 수출비용으로 작용하면서 은행무역금융은 물론 거래무역금융에도 영향을 미침 - 장명기(2012) : 금융위기 이후 국제규제에 따른 무역금융의 위축 주장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의 국제규제 추이 분석을 통한 국내 은행의 영향 분석 - 국내은행의 무역금융 위축 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 제시 -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한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상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무역금융제도의 필요성, 무역금융과 수출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가 무역금융을 축소하는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중은행 중심의 우리나라 무역금융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무역금융제도의 의의

좁은 의미에서 무역금융이란 무역대금채권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 또는 무역대금채권 상환 불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등을 의미한다⁵⁾. 넓은 의미에서 무역금융은 무역거래에 필요한 자금의 용통 및 조달까지 포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출입업체간의 신용제공 등도 무역금융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역대금결제방식도 무역금융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⁶⁾.

이러한 무역금융제도는 다양한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으나 통상 무역금융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수출물품등의 생산, 원

1) Beck, T,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s There a Link?,"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7:1, 2002.
 2) Chaney, T, "Liquidity Constrained Exporters,"University of Chicago, mimeo, 2005.
 3) Auboin,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Treatment of Trade Finance : What Are the Issues?,"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10-09, 2010.
 4) Asmundson, I., T. Dorsey, A. Khachatryan, I. Niculcea, M. Saito, "Trade and Trade Finance in the 2008-09 Financial Crisis", IMF Working Paper, WP/11/16, 2011.
 5) Ahn, J.(2011), "A Theor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Finance", IMF Working Paper, WP/11/262.
 6) Chauffour, J.-P., T. Farole(2009),"Trade Finance in Crisis Market Adjustment or Market Failure?," World Bank Working Paper No. 5003.

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의미한다.

법규적인 의미의 무역금융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11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의 금융기관별 한도 배정을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 원화대출과 관련된 지급보증제도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금융제도라는 의미를 법령에 명시된 제도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또한 무역금융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선적 전 지원금융이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에 지원하고, 수출대금으로 용자금을 상환시키는 선적 전 금융이다. 반면에 수출환어음매입(negotiation)제도 및 기한부신용장(usance L/C) 등은 선적 전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출단계별로 지원한다. 수출신용장 또는 과거 수출실적과 연계하여 수출이행 전과정을 대상으로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 구입자금 등 수출이행 과정별로 지원한다. 즉, 무역금융은 하나의 수출신용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각 자금별로 소요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이 US\$5천만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포괄금융의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내국신용장(Local L/C)제도를 운영한다. 무역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수출신용장을 수취하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자 뿐만 아니라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 생산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 생산업자도 직접 수출자와 동등한 차원에서 금융을 지원한다.

넷째,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한다. 자금의 수출 진흥을 위한 소정의 목적 이외에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은 해당업체의 일반현황, 생산시설, 수출능력 등을 파악하는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용자금의 수출 대금 등에 의한 회수원칙과 부당한 금융수혜 등에 대한 제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용자취급은행을 제한한다. 하나의 수출신용장과 관련된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우리나라 무역금융의 현황

1) 우리나라의 무역금융 추세의 특징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금융 추세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출증가에 따른 결제수요 확대, 환율변동성 축소기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수출환어음 매입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국내은행의 매입외환 잔액은 216.7억 불로 2009년말(201.1억불) 대비 15.6억불(7.8%) 증가하였으며, 2011년 말 매입외환 잔액도 일본 지진의 반사효과, 한-EU FTA 발효 등에 따른 수출확대로 236억불(8.8%)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무역금융 현황의 두 번째 특징은 수입증가에 따른 자금수요 확대, 국내기업의 신용도 개선 등으로 내국수입유산스⁸⁾ 규모의 확대이다. 2010년 말 국내은행의 내국수입유산스 잔액은 240.1억불로 전년말(197.6억불) 대비 42.5억불(21.5%) 증가하였으며, 2011년 말에는 내국수입유산스 잔액도 수입확대, 원유 등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273억불(13.7%)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우리기업의 수출증가에 따라 수출신용기관의 단기 수출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⁹⁾, 향후에도 시중은행의 무역금융을 보완하는 성격으로서 수출신용기관의 단기 여신 수요가 유지될 전망이다¹⁰⁾.

2) 무역결제방식의 추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무역대금결제방식을 살펴보면 사전송금방식(cash-in-advance), 사후정산거래방식(open account), 은행중개가 필요한 추심·L/C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2년 수출을 기준으로 사전송금방식이 50.0%, 사후정산거래가 13.6%, 추심방식이 9.4%, L/C방식이 13.7%, 기타 임가공료지급 등이 13.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결제방식의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L/C방식, 추심방식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사전송금방식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기타 방식의 비중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와 같은 무역결제방식별 비중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과 비교할 경우 그 흐름이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1>를 보면 결제방식별로 증감률 변화폭의 차이는 있지만 금융위기가 크게 위축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¹²⁾.

7) 환율변동성이 높아지면 환율민감도가 높은 일부 대기업은 환차손 우려 영향으로 무역금융(매입외환)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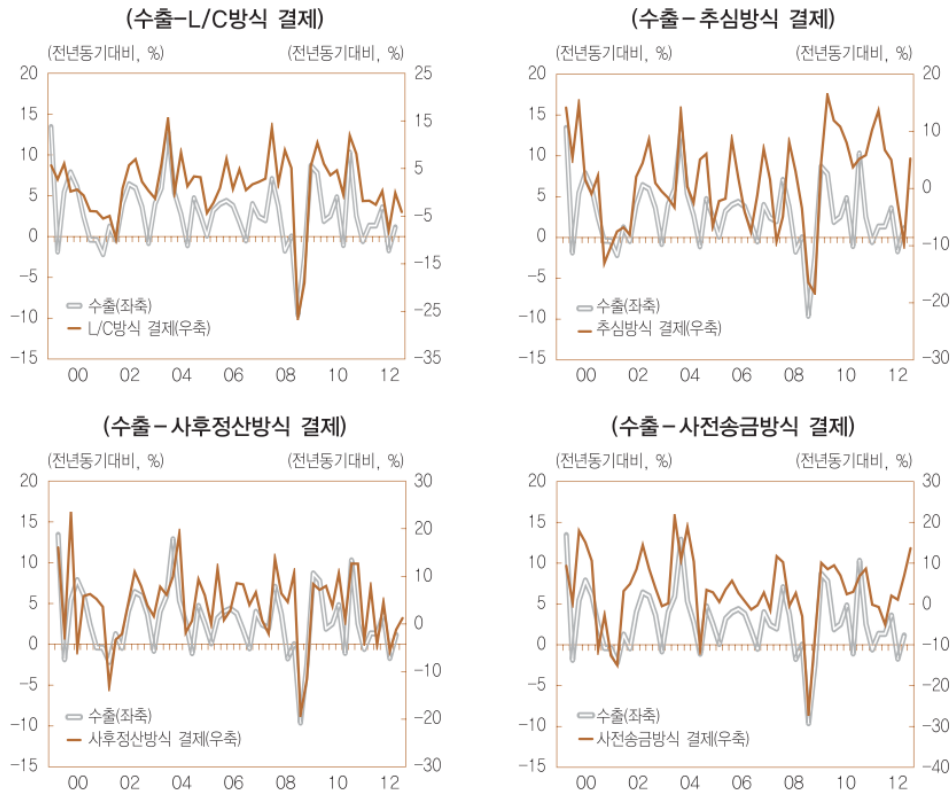
8) 국내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외국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인수·매입함으로써 어음기간 동안 국내 수입업자에게 신용공여하는 방식

9) 한국수출입은행은 (2005년) 25.1조원 → (2007년) 38.8조원 → (2010년) 56.0조원으로 확대 지원하였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5년) 57.0조원 → (2007년) 66.4조원 → (2010년) 168.6조원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10) 금융감독원, “우리나라의 무역금융현황 및 공적 무역금융 지원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자료, 2011. 6, p.5.

11) 장정석·한혜린, “무역금융과수출간의 관계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3. 2. p.16.

12) 장정석·한혜린, “전계논문”, p.18.



자료 : 장정석·한혜린, “무역금융과수출간의 관계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3. 2, p.18.

<그림 1> 수출과 무역결제방식

Ⅲ. 세계 무역금융시장의 현황과 국제적 규제

1.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추이와 바젤 III

현재 단기 무역금융(협의)에 대한 국제적인 공통규범¹³⁾은 없으며, 각국은 자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무역금융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금융 기준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 통일규칙¹⁴⁾ 정도가 존재한다. 또한 국제팩토링협회

13) 무역금융 관련 대표적인 국제규범인 「OECD 수출신용협약」의 경우 상환기간 2년 이상의 중장기 거래 지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FCI), 국제포페이팅협회(IFA) 등 민간단체¹⁵⁾를 통해 관련 업무 취급 가이드라인을 제정, 회사 간 운용중에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 금융규제 완화 및 국제화에 따른 은행간 경쟁 심화로 은행의 자산 운용 전략이 고위험·고수익 구조로 변화되어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은행 자본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8년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anagement and Capital Standards(바젤 I)”을 제정하여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04년 바젤위원회는 리스크관리 역량의 발달과 은행간 격차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 측정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바젤 II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기존의 금융규제체계가 미흡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09년 12월 바젤 III를 도입하였다¹⁶⁾.

2005년부터 적용되었던 기존의 바젤II는 최저 자본비율규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과 시장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시장 감시가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일부 은행들의 BIS자본비율이 충분히 높았음에도 유동성 리스크가 타 금융기관으로 전과되어 시스템 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과도한 자산 확대 억제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안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존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합의하였다. 바젤 III에서는 자본비율에 대한 규제가 바젤 II보다 더욱 강화되는 한편 레버리지비율과 유동성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다.

2. 바젤 III 규제의 주요 내용¹⁷⁾

1) 자본비율 규제 강화

바젤 III에서는 자기자본의 양과 질을 강화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 시스템리스크 축적을 억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첫째, 자기자본내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를 중심으로 Tier 1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Tier 1 자본은 보통주 자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부가적 자본도 포함한다.

14)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취급시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통일규칙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 간 사전 합의의 시에만 적용된다.

15)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일하게 FCI, IFA에 가입중이다.

16) 서병호, “바젤 III 유동성규제의 국내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핑 19권 41호, 2010. 10, p.4.

17) BCBS(2010c), KB 금융지주(2012) 김경훈(2011)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리

보통주 자본비율을 현행 2%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5년에는 4.5%로 Tier 1 자본비율도 현행 4%에서 6%로 인상하였다. 다만 총자본비율은 현재와 같은 8%를 유지하기로 하였다¹⁸⁾.

둘째, 이연세금자산, 무형고장자산, 타금융회사 출자 등을 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도록 하는 등 자기자본 범주를 엄격히 정하였다.

셋째, 일반상황이 아닌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자본을 부과하는 등 리스크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넷째, 호황기에 축적한 자본을 활용하여 경기침체에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0~2.5%의 완충자본을 새로 도입하였다. 바젤 II의 자본규제는 경기악화시 리스크자산의 증가와 자기자본 축소로 은행대출이 억제되는 반면, 호황기에는 대출이 더욱 확대되어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추세치를 활용하여 최저소요 자기자본의 변동 억제, 미래 기대손실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충당금제도, 배당 등 사외유출 억제, 거시경제상황에 대응한 완충자본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다섯째, 금융시스템과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G-SIFI(글로벌 시스템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통주자본 기준 1~3.5%의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¹⁹⁾.

2)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리스크 중심 자본규제 접근법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과 무관한 회계상 명목금액 기준으로 자본을 부과하는 비리스크적 수단으로서 레버리지비율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레버리지가 축적된 금융회사는 위기발생시 레버리지 감축압력을 크게 받아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걸쳐 충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레버리지 비율 3% 적용은 무역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²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자기자본 비율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외거래(off balance sheet items)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축적한 금융회사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익스포져 대비 기본자본(Tier 1)이 3%를 초과하도록 설정하였다. 단 2011년부터 보조지표로 사용하다가 2018년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하였다²¹⁾.

18) 한국금융연구원 동향실, “바젤III 자본규제의 주요내용”,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핑 19권 38호, 2010. 10, p.15.

19) 김자봉, “바젤III 규제수단 간 상충 가능성과 정책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핑 21권 26호, 2012. 6, p.4.

20) 장명기, “금융위기이후 국제규제와 무역금융의 변화 전망”,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2. 8, p.276.

21) 김자봉, “전계논문”, p.5.

〈표 2〉 레버리지비율 주요내용

구분	바젤 II	바젤 III	비고
레버리지 비율	없음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레버리지 증가억제 • (기본자본/익스포저) ≥ 3%

3) 유동성 규제의 도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측면의 규제강화 조치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자본규제보다 유동성규제 강화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은행들은 보유자본이 충분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위함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 위기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증폭되고, 보유자산 혈값 매각 등에 따른 자산가격 급락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동성비율과 순안정자금비율 규제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유동성비율(LCR) 규제는 은행이 심각한 스트레스상황에서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액(net cash outflows)을 충당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²²⁾

$$\text{유동성비율} = \text{고유동성자산} / \text{순현금유출} \geq 100\%$$

여기서 스트레스 상황이란 신용등급 3단계 하락, 소매예금 일부 이탈, 무담보 도매자금 조달능력 상실, 시장변동성 증가에 따른 담보가치 인정비율 하향조정 또는 추가담보 적립 등을 상정하여 감독당국이 설정한다.

고유동성 자산(stock of high quality liquid assets)은 담보제공 또는 헤지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자산 중 위기상황에서도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현금, 현금등가물, 중앙은행 예치금,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구권 또는 증권 등)이며, 국채는 100%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며 우량 회사채는 75%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불일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은행의 1년 동안의 ‘가용 안정적 자금(부채 및 자본)’이 ‘필요한 안정적 자금(자산)’의 100%를 넘도록 하는 순안정적자금조달 비율(NSFR) 규제를 도입하였다.

$$\text{순안정적자금조달 비율} = \text{가용안정적 자금} / \text{필요안정적 자금} \geq 100\%$$

22) 서병호, “전계논문”, p.5.

여기서 가용 안정적 자금(available stable funding)은 자본, 만기 1년 이상 우선주, 유효 만기 1년 이상 부채, 안정적 비만기성예금 등의 합계를, 필요 안정적 자금조달(required stable funding)은 1년 동안 유동성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내외 익스포저 중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말한다.

새로 추가된 유동성 비율과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각각 2015년과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

		바젤II	바젤III	비고
최저필요자본	Total Capital	≥ 8.0	≥ 8.0	· 자본의 質 제고 · 무형자산 등을 자본에서 공제
	① Tier1 보통주자본	≥ 4.0	≥ 6.0	
	② Tier2	≥ 2.0	≥ 4.5	
	③ Tier3	②+③ ≤ ①	Tier3 폐지	
완충자본	자본보전용	없음	≥ 2.5	· 평상시 : 일정수준 이상 유지
	경기대응용	없음	0~2.5	· 위기시 : 동 자본으로 손실흡수
레버리지 비율	Tier1/총자산	없음	≥ 3.0	· 과도한 레버리지 증가 억제

〈그림 2〉 바젤 II 및 바젤 III의 자본규제 비교

3. 바젤 III 도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바젤위원회는 2010년 12월 16일 바젤III 도입시 은행의 자본-레버리지 및 유동성 비율 현황에 대한 규제영향평가(QIS) 결과를 발표하였다. 규제영향평가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중 23개 국가의 26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8개 은행이 동 규제영향평가에 참여하였으며, 규제영향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본비율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주요 선진은행들이 영업권 등 바젤III에서 더 이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제항목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3개국 대형은행(Group 1)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1.1%→5.7%

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3개국 대형은행 기준으로 바젤Ⅲ(자본보전 완충자본 포함 기준)에 따른 자본 부족규모는 보통주자본 기준으로 5,770억€(880조원 상당) 수준이며, 이는 2009년 조사대상 은행의 배당전 이익(2,090억€)의 2.8배 정도 수준에 달한다.

반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바젤Ⅲ 기준으로도 10.3% 수준으로 규제자본비율(자본보전 Buffer 포함 7%)을 3.3%p 상회하였다. 국내은행들은 바젤Ⅲ를 시행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표 3〉 바젤Ⅲ 도입에 따른 규제자본비율(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	Tier 1 비율	총자본비율	공제항목에 의한 보통주자본 감소
대형 은행	23개국 평균	11.1 → 5.7	10.5 → 6.3	14.0 → 8.4	△41.3%
	국내QIS은행	11.3 → 10.3	11.1 → 10.4	14.7 → 13.5	△3.2%
기타 은행	23개국 평균	10.7 → 7.8	9.8 → 8.1	12.8 → 10.3	△24.7%
	국내QIS은행	10.4 → 9.7	10.7 → 10.0	15.3 → 13.4	△1.8%

주 : 대형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등 5개), 중소형은행(농협, 대구, 부산 등 3개)
 자료 : ‘바젤 Ⅲ 규제영향평가 결과 및 파급영향’,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 12, 16)

그러나 선진국 은행들이 앞으로 자본조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은행도 만기도래하는 후순위채권 등의 차환발행시 다소 부담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와 더불어 부실 우려시 보통주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도록 하는 조건부자본을 의무화할 경우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본조달비용의 상승은 결국 무역금융 부분에도 적용될 것이며,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에게 그 비용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2) 레버리지비율 도입에 따른 영향

23개국 대형은행의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2.8%로 조사대상의 42%가 규제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은행들은 주로 유가증권, 파생상품, 유동화증권 등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된 자산을 중심으로 그동안 레버리지를 많이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대형은행의 경우 평균 4.6% 수준으로 규제수준(3%)을 크게 상회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은행들이 레버리지비율을 공시해야 하는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파생상품 등을 통한 레버리지 확장이 현재보다는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레버리지 비율 계량영향평가 결과

구분	대형은행(group 1)	중소형은행(group 2)
레버리지 비율	4.6	5.1

주 : 대형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등 5개), 중소형은행(농협, 대구, 부산 등 3개)
 자료 : ‘바젤 III 규제영향평가 결과 및 파급영향’,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 12, 16)

3) 유동성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23개국 대형은행의 단기유동성비율(LCR)은 83%, 중장기유동성비율(NSFR)은 93%로 규제수준(10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LCR을 맞추기 위해서는 1.7조€(2,600조원 상당)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NSFR 준수를 위해서는 2.9조€(4,430조원 상당)의 안정자금이 필요하다.

국내은행의 경우에도 QIS 대상 대형은행의 LCR은 76%, NSFR은 93%로 규제수준에는 크게 미달되는 수준이다.

<표 5> 바젤 III 유동성 비율 규제현황

		LCR	NSFR
대형은행	23개국 평균	83%	93%
	국내QIS은행	76%	93%
기타은행	23개국 평균	98%	103%
	국내QIS은행	75%	99%*

주 : 대형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등 5개), 기타은행(농협을 제외한 대구, 부산은행 평균)
 자료 : ‘바젤 III 규제영향평가 결과 및 파급영향’,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 12, 16)

이에 따라 국내은행도 안정적 소매예금 확보 노력 강화,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중심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등 예상된다. LCR에서 낮은 이탈율(5%)이 적용되는 안정예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급여계좌 고객 등 주거대출고객에 대한 차등 금리 적용 등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에서는 국공채나 AA- 등급 이상 회사채 투자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은행채도 유동성비율을 감안하여 1년물 보다는 2~3년물 중심으로 만기 장기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현금유출 요인 중 국내은행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외 신용-유동성 공여 약정은 향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시사점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바젤 III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바젤 III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면 앞서 논의 한 것과 같이 자본비율규제에 따른 무역금융비용의 증가와 선진 은행들의 자금회수로 인한 무역금융서비스 공급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단기유동성(LCR)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형은행들의 무역금융 취급을 축소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은행채의 만기 장기화 현상은 자금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자금회수 기간을 늘리는 양상으로 그 위험이 전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역상대국 특히 저소득국가들과 중소기업 등이 직면하게 될 무역금융비용 증가와 충분하고 저렴한 무역금융서비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무역거래의 위축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이다²³⁾.

IV. 국제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향

1. 금융시장의 국제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향

현재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지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른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업의 수출활동에 큰 효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무역규모 확대 추세에 적합한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무역금융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2011년 6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상기 보고에는 무역금융지원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역할강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방안에 대한 제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6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에서 제시한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 지원방향을 바탕으로 현행 무역금융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23) 장명기, “전계논문”, p.282.

2.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1) 해외진출기업은 무역금융 대상에서 제외

최근 기업들은 저임금 활용 및 관세 등 교역장벽 해소를 위해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 생산·판매 법인을 통한 수출 비중도 2009년 3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무역금융제도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용자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해외 진출기업이 현지법인을 통하여 거래한 경우 무역금융 용자대상²⁴⁾에서 제외되고 있어, 해외진출기업이 현지법인을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 무역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다.

〈표 3〉 최근 5년간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a)	910	987	1,206	1,270	1,304
우리나라 총 수출(b)	2,844	3,255	3,715	4,220	3,635
현지법인 수출 비중(a/b)	32.0%	30.3%	32.5%	30.1%	35.9%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 해외진출기업의 무역금융 지원방안

현재 시중은행의 용자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지원체계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현지법인을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 용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일본의 경우는 2009년 JBIC를 통해 현지통화대출 확대를 위해 개도국 통화스왑 전문기관인 네덜란드 TCXF(The Currency Exchange Fund)에 50백만불 출자하여 현지 영업시 필요한 현지통화 조달 비용을 절감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및 원활한 현지 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²⁵⁾.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무역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자대상에 생산자금, 원자재자

24) 현행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관련 무역금융 용자대상에는 ① (생산자금)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거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② (원자재자금)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③ (완제품구매자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5) 금융감독원, “우리나라의 무역금융현황 및 공적 무역금융 지원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자료, 2011. 6,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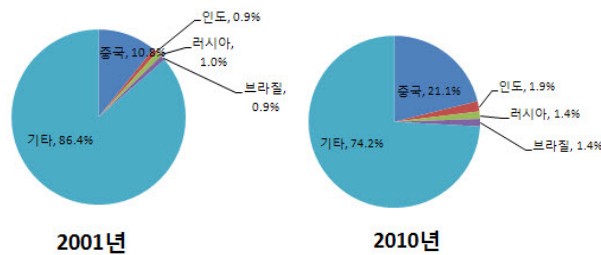
금, 완제품구매자금 이외에 현지 법인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제규범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을 통한 지원보다는 무역지원을 위한 공적 기관을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단기간에 그 효과를 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시행중인 투스텝복합금융²⁶⁾을 현지 생산체제 구축시장 개척지원을 위하여 전대은행을 통한 현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판매보험²⁷⁾을 활용하여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의 미회수 보험에 대한 담보를 확대하는 등 여신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지법인을 통한 무역거래의 효율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

1) BRICs 국가들과의 교역 증가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 일본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과도한 구조로 성장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어져 수출입구조의 다양화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개도국 수출 비중이 2008년 68.9%, 2009년 71.2%, 2010년 71.8%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대표적 신흥시장인 BRICs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5.8%로 2001년(13.6%)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²⁸⁾.



자료 : 금융감독원, “우리나라의 무역금융현황 및 공적 무역금융 지원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자료, 2011. 6, p.10.

<그림 4> 우리나라의 對BRICs 교역 비중

26) 투스텝 복합금융이란 i) 현지 우리법인의 설비·운영자금, ii) 우리법인과 거래하는 현지기업의 우리법인 물품/서비스 구매자금 제공하는 것을 말함.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규모는 2010년 4,600억원에서 2011년 7,000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액할 계획임.
 27) 재판매보험이란 수출기업이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에서 해외지사의 대금 미회수위험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담보하는 제도
 28) 금융감독원, “전개보고서”, p.10.

한편,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방식이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對개도국 거래는 신용위험 문제로 신용장 방식(금융기관의 지급약정)의 활용도 18.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BRICs 국가와 같이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용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한 차별화된 무역금융지원이 필요하다.

2) 개도국과의 교역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방안

수출입시장의 다양화는 선진국과의 교역중심에서 개도국과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금융기관(신용장 개설은행) 및 수입자의 높은 신용위험으로 인해 시중은행을 활용한 무역금융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신용위험이 높은 교역상대국과 거래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리의 자금지원형태의 무역금융지원보다는 공공부분이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한 신용위험의 감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용조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신용시장 신용조사기관 지속 발굴, 해외 금융기관 제휴 등을 통해 수입자 신용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DB화를 통해 손쉽게 공유하도록 하여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기간 단축, 조사보고서 품질개선 지속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대금융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시중은행이 개도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를 이유로 금융지원을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신흥국에 대한 금융수요 파악을 통해 현지 금융기관과 한국수출입은행 간 전대한다 신설, 확대를 추진을 통해 금융기관이 가지는 신용위험을 경감시켜야 한다.

4.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확대

1) 중소기업의 무역비중 하락

한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논할 가치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시장은 국내에 한정되는 경향이 짙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기업수 및 고용창출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은 32.3%를 기록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대기업이 취급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의 품목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무역비중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4〉 2009년도 5대 수출품목의 대기업·중소기업 비중

순위	품목	수출총액 (억불)	수출비중(%)	
			대기업	중소기업
1	선박	372.2	86.6	13.4
2	유무선통신기	295.3	89.7	10.3
3	반도체	243.8	65.8	34.2
4	액정디바이스	234.0	95.8	4.2
5	자동차	224.0	95.1	4.9
계	5대 품목	1,369.0	86.5	13.5

2) 저금리 용자정책에서 공적업무 강화로 전환

중소기업이 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측면에서 보면, 수출입 대금의 확보와 수입대금의 신속한 회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대기업 중심의 무역구조도 해소될 수 있다.

먼저, 수출입 대금의 확보를 위한 공적부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수출입 관련 자금조달을 위해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중심에서 공적부문의 신용보증제도의 활용이 손쉬워야 한다. 중소기업이 무역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을 통하여 시중 금리보다 약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은 대외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회수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각종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실상 수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수입대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공적부문의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대금의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금융제도 중에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더라도 대금의 회수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대금지급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금융의 자금지원을 시중은행의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년초에 일괄적으로 사전지급하고 중소기업이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하여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5.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바젤 III에서는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은행의 과도한 자산확대 규제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새롭게 도입하여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여 최종안을 도출하고 2018년 강행규정 시행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바젤 III에서는 은행이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부작용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신용기관의 보험, 보증을 받은 무역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위험경감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산정하고 있다.

〈표 5〉 무역금융 관련 수출중소기업 주요 애로사항

구 분		자기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난내 무역금융	무역보증기관 보증대출	0%	100%
	기타 무역금융대출	20~150%(신용등급기준)	100%
난외 무역금융	신용장(L/C) 개설	20%	100%
	이행성보증	50%	100%
	미사용약정	75%	100%
	지급보증	100%	100%

이에 따라 실물거래에 기반한 무역금융은 여타 대출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동일하게 취급됨에 따라 향후 세계 무역금융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²⁹⁾.

이러한 바젤 III 도입에 대하여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무역금융을 달리 취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대외협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특성상 대단히 전문적이며 무역거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외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금융부분, 무역부분, 협상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출범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9) 금융감독원, “전개보고서”, p.15.

IV. 결론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지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른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업의 수출활동에 큰 효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무역규모 확대 추세에 적합한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1년 6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무역금융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방안도입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융자대상에 현지 법인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 지원을 포함시켜야 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시행중인 투스텝복합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판매보험을 활용하는 등 여신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지법인을 통한 무역거래의 효율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고 신용위험 국가과의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공유하여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기간 단축, 조사보고서 품질개선 지속 추진하고, 전대금융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확대를 위해 담보제공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무역금융의 자금지원을 시중은행의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년초에 일괄적으로 사전지급하고 중소기업이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무역금융을 달리 취급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병덕, “바젤 III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10. 11.
- 김정훈, “금융리스크와 바젤 III의 주요내용”, 한국은행, 「한은 금요강좌」, 2011. 03. 11.
- 금융감독원, “바젤 III 규제영향평가 결과 및 파급영향”, 보도자료, 2010. 12. 16.
- 금융감독원,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결과”, 보도자료, 2012. 01. 09.
- 서병호, “바젤 III 유동성규제의 국내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19권 41호」, 2010
- 임재욱, “포페이팅 통일규칙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권 2호, 2012.
- 한국은행, “최근 무역금융 동향 및 주요 현안”, 대외경제국, 2010. 09. 28.
- 금융감독원, “우리나라의 무역금융현황 및 공적 무역금융 지원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자료」, 2011. 6.
- 장정석·한혜린, “무역금융과수출간의 관계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3.
- 한국금융연구원 동향실, “바젤III 자본규제의 주요내용”,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핑 19권 38호」, 2010. 10.
- 김자봉, “바젤III 규제수단 간 상충 가능성과 정책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핑 21권 26호」, 2012. 6.
- 장명기, “금융위기이후 국제규제와 무역금융의 변화 전망”,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2. 8.
- Ahn, J., “A Theor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Finance”, IMF Working Paper, WP/11/262, 2011.
- Chauffour, J.-P., T. Farole, “Trade Finance in Crisis Market Adjustment or Market Failure?,” World Bank Working Paper No. 5003, 2009.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Trade Finance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regulations

Hong, Gil-Jong* · La, Kong-Woo**

In the past, an policy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export has actively used trade finance, but also in its effect there is no doubt.

However, in 2008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trigger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the need to effectively manage liquidity risk posed, and was a debut for Basel III.

Focusing on trade finance banks are being made. Domestic commercial banks have not been able not utilize various trade finance techniques. In these situations, the introduction of Basel III can discourage trade finance. Therefore, responses should be prepared for i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rade finance system.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are investigated for changes. Based on thi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s trade finance is proposed.

Key Words : Trade finance,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regulation, Basel III

* Instruct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